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약 공세! 7월 20일 정치 총파업으로 분쇄시켜 나가자!

7월 정세, 노동개약 공세의 전면화와 총파업 투쟁의 시작?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탄압은 이 시대 노동자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전면적인 생존권 공세가 밀고 들어오고 있다.

제조 현장에서의 단협개약, 조선 산업의 전면적 구조조정 공세, 공공 성과연봉제 관철과 민영화 방침, 그리고, 노조 파괴를 포함한 노동탄압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현상적으로는 각 산업 및 부문에서 해고 및 임금삭감, 단협파괴, 노조 탄압이라는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있으나, 정부 노동정책의 직접적이고 동일한 지반 위에서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정부 여당의 4·13 총선 패배 후, 법제도의 개약을 통한 방식이 여소아대의 국회에서 여의치 않자,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노동개약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반기 동안 총 투쟁전선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정부공세에 끌려온 측면이 있다. 4·13 총선의 결과 집권 새누리당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원인은 현 정세에 대한 단일한 인식과 총체적인 정치 투쟁전선에 힘을 기울이기 보다는 각자각자 임단협 등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조합 지도부를 현장에서 투쟁으로 가도록 강력하게 강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7월 초 현재, 정부의 도발(?)적인 공세에 따른 노동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7월 20일 정치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였다.

정부의 도발적 공세에 따라, 대중 투쟁동력이 급속히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 작년과는 확연하게 다른 주체적 정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급속, 공공, 건설 등 주요한 조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파업 내지 대규모 투쟁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적인 측면에서 작년의 경우에는 위로부터 선제적인 4·24 파업과 국회 법처리를 중심으로 노동개약 등 투쟁전선이 형성되었다면, 2016년 상황은 현장에 무차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노동개약 공세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분노가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전 사회적으로도, 노동진영이 끊임없이 제기했던 최저임금 인상 및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공감대도 비교적 높아져 있다는 측면에서 투쟁의 외적 환경은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

7월 총파업의 성격은 노동개약에 맞선 정치 파업! 전국 노동자의 단결을 최대한 높여 나가야 할 때이다

7월 투쟁을 발판으로, 하반기 9, 10월 전면적인 투쟁으로 나아간다면 노동개약을 분쇄할 수 있다. 노동자들만이 박근혜 정부에 맞선 실질적 투쟁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부지런히 투쟁을 조직해야 할 때이다. 노동자의 거대한 투쟁으로 박근혜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어 내야 한다.

부르주아 야당들은 절대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약 정책을 돌려세울 수 없다. 의지도 능력도 없다. 그저, 분노하고 있는 노동자와 민중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책임만 면하려 할 뿐이다. 총선 때처럼 대선에서도 어부지리를 얻고자 부심하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2016년 박근혜 정부 집권하에서 골치 아픈 노동개약(공공민영화와 성과급제, 조선 구조조정, 쉬운 해고제)이 처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이다. ‘경제위기에 따른 노동자 죽이기 해법’에서 변별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7월 총파업 투쟁의 위상과 성격은 ‘노동개약에 맞선 총노동 정치파업’이라 할 수 있다.

4·13으로 기죽어 있던 박근혜 정부가 노동을 때려잡고 기세등등하게 살아 돌아오게 할 것이냐? 생존권의 비랑에 몰린 노동자계급이 다시금 파업의 깃발을 들고 정국을 주도할 것이냐?

정부와 노동자들 간의 충돌은 이미 피하러야 피할 수가 없는 정면대립의 선상에 올라있다.

7월 총파업이, 노동개약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경고성 정치파업이고, 향후 전면파업의 발판이라고 했을 때, 어떠한 각오와 목표로 조직할 것인가?

첫째, 파업에 대한 자신감이다.

대적투쟁을 앞둔 사람이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요행이나 다른 사람이나 타세력의 힘을 빌려야 하

는데, 국회 법처리는 야당이 반대하면 어렵지만 현재는 현장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파업 말고는 막을 재간이 없다. 이러한 현실적 정세 때문인지, 예전 같으면 ‘파업 만능론’이라며 평론가처럼 굴던 이들도 파업을 대놓고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현실이 파업을 강제하고 있는 정세, 즉, 현장 동력이 없어서, 지도부가 파업의지가 약해서 등등의 이유가 사라진다는 점은, 노동자 파업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도 통한다. 87년, 97년 파업 등의 역사를 교훈 삼고, 작년 파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절대다수의 쪽수로 일시에 생산과 물류와 공공 등 그리하여 세상을 멈추는 파업을 상상하고, 활동가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조직해 나가야 한다. 이것 말고, 답이 있는가? 투쟁주체들이 처해 있는 조건이 파업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는 것과 함께, 투쟁의 외적인 정세도 그렇다. 한마디로 4·13 이후 박근혜 정부는 고립되어 있다. 가장 우선되게는 경제 환경이 거의 극한 상황이다. “경제도 안 좋은데 파업까지 한다”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으니 파업으로 바꾸려 한다!”라는 정세를 적극 만들어야 한다.

둘째, 노동자는 하나라는 계급적 단결력을 높여야!

전면파업, 정치파업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당면정세를 관통하는 핵심쟁점에 대한 요구와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구심이 강해야 한다. 작년 4·24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등은 총파업을 앞세운 직선제 집행부의 신뢰가 구심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노동개약에 대한 위협이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 2016년 투쟁은 작년보다 훨씬 파괴력 있게 상승할 수 있다. 우선, 지도부를 중심으로 큰 기조의 변화 없이 노동개약 총파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노동개약이 위협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의 국면에서 절대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있다. 파업을 크고 높게 하기 위해 노동자 공통의 요구와 쟁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 노동자계급이 직면한 쟁점은 ‘노동개약과 구조조정, 노동탄압’이라 할 수 있다. 병렬적으로 분산되어서는 투쟁을 모을 수 없다.

따라서, 7월 투쟁을 통해 투쟁의 쟁점들을 모으고, 노동자들을 하나로 더 크게 모아나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문제를 공공산별 노조만의 문제로 본다면, 올해 투쟁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다. 임금삭감에 더해서 조직 노동자 파괴를 핵심 포인트로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 구조조정이 먼 지역이나 비정

규직의 특수로 보거나, 현재의 경제위기의 반영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것이 된다. 비정규직의 해고는 정규직의 미래다. 그렇기에, 공공, 금속, 건설 등등 각 부문의 쟁점이 결국은 이 시대 모든 노동자계급의 공동된 고통과 요구임을 7월 투쟁을 통해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이것은 준비된 곳만이 아니라, 공통의 처지에 몰린 다수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자름길이기도 하다.

셋째, 경제위기, 투쟁으로 노동자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투쟁이 없게 된다면, 파업을 위한

파업에 그치고 만다. 작년 파업은 다분히 관료적으로 조직된 한계가 많았다. 또한, 파업투쟁에 정치적 좌표가 부재하기도 했다. 노동자의 요구는 ‘노동개악 저지’로부터 민중총궐기 12대 요구로 수렴되었다. 현재의 투쟁국면은 파업 몇 번, 대규모 집회 몇 번으로 감당할 수준이 절대 아니라고 했을 때, 무기한의원 현장 파업과 거리에서 다수가 운집하는 형태의 정치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생존권적 요구와 함께 자연스럽게 정치적 요구가 분출되기도 한다. 활동가들은 이를 예비해야 한다. 당면한 정치적 요구와 부문의 요구를 넘어, 반자본주의적 노동자계급의 요구를 적극 만들어 나가자! **노동전선**

전선 칼럼 (1)

2016년, 노동운동의 변곡점에서...

한국노동계급의 명운을 좌우할 2016년 투쟁이 전국의 현장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구조조정 문제, 퇴출연봉제 도입 문제, 노동개악 등이 전 산업과 각 단위 현장의 노사 간에 다양한 수위로 격돌하고 있다. 자본의 위기를 노동에 전가시키려는 시기 전략의 측면과 노사관계의 구조적 질서재편 전략이 혼재되어 있다. 현 국면의 특징은 이 양자 간에도 전략적 교호작용이 존재한다는 점이며, 이것이 2016년 현재를 노동운동의 변곡점으로 가정하는 주요 이유이다. 제조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 도입문제는 이란성 쌍둥이처럼 자본의 동일한 전략에서 기원하고 있다. 자본의 이러한 구조조정 전략의 법제도적 완성이 노동개악이다. 즉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이라는 양날의 칼이 조직노동의 핵심부를 겨냥하고 있고 미조직 노동의 노예화를 시도하고 있다. 현 시기 한국노사관계를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혼합하여 면밀히 살펴볼 때 노동정세의 화급함은 재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87년 체제가 30년에 이르러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한국사회가 오랜 군부독재 체제를 지탱했던 간선 권력구조 결정의 방법을 직선제로 변경한 개헌만이 아니라, 노사관계의 질서 재구축을 했던 87년 노동자대투쟁으로부터도 그러하다. 지난 30년간 공고롭게도 매 10년 정도마다 노사 간에 역관계 재조정을 위한 격돌이 수위를 막론하고 존재했다. 한국노동운동은 87년 노동자대투쟁, 96-97년 노개투 총파업, 2006년 비정규 악법과 노사관계로드맵 분쇄 투쟁, 2016년의 노동개악 및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통해 자본의 질서재편 전략에 대응해 왔다.

2016년 투쟁은 작년 투쟁에 이은 연속적 측면이 존재하며 전방위적인 자본의 실질적 공세에 직면해 있다. 하여,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2016년 투쟁은 한국노사관계 30년의 결산과 향후 재편될 노사관계 질서에서 노동계급의 위치를 결정할 변곡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른바 10년 주기설에 의하더라도 올해의 구조조정과 노동개악 저지투쟁의 결과에 따라 한국노동계급의 상태와 노동운동의 미래는 결정적으로 달라질 상황이다. 이러한 역사적 변곡점에서 한국노동계급의 상태와 민주노조운동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2016년 투쟁의 카운트다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해서 민주노조운동의 최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작년에 이어 총파업 전략을 변함없이 구사하고 있다. 올해 총파업의 위력도 변함없이 민주노총이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한 동력과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동력의 총합이며, 2016년 대회전의 성과를 가능하게 될 것이다.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의 법제도적 완성을 통해 자본의 위기를 전가하려는 노동의 위기 국면에서 정확한 반격을 조직하자. 현재의 노동자들이 향후 10년, 20년 동안 고스란히 현장에서 온몸으로 받게 될 노사관계와 30년 후의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겨줄지 2016년 투쟁의 행배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자. 긴박한 정세와 결정적 변곡점에서는 조직적 실천의 집중과 선택의 교차선택이 아니라 일치를 지향해야 한다. 올해 2016년이야말로 조직적 실천의 집중과 선택의 일치점이 되어야 하는 국면임을 잊지 말자. 자신감을 가지고 현장실천과 사회변혁의 기치로 노동운동의 현장에서 승리를 조직하기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자.

이호동(공동대표)

공공부문 노동자, 정권에 맞서 대호전을 전개할 때이다!

— 노예연봉제 · 상시 해고제 · 공기업 사유화에 맞선 투쟁

— 철도노조 등 공공운수노조 산하 핵심노조가 전면에서 나서자!

공황의 태풍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타격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과잉생산에 따른 공황이 이미 한반도에도 상륙했다. 조선 · 해운 · 철강 · 플랜트 · 건설 산업을 비롯하여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조선 산업에 12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노동자 8만 명을 정리”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정부는 독점재벌에게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하고,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을 전면화하고 있다. 정부 · 여당뿐만 아니라 ‘더민주’, ‘국민의당’ 등 야당도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새누리당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본의 위기에 따른 태풍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타격하고 있다. 독점자본의 정치적 파수꾼으로서 국가권력은 공황구제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비용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확보한 불안정한 노동3권조차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철저히 개별적 노사관계로 전환시켜 단결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연봉제 · 퇴출제의 관철은 민주적 · 자주적 노조의 부정과 구조조정의 전면화를 의미한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조차 일상적인 ‘직권면직(해고)’과 공기업 사유화를 통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권력, 노골적으로 자본독재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6월 14일 공공기관 워크숍을 열고 전력, 가스 등 에너지부문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의 경우 6개 자회사로 전환하는 계획이 연말을 기점으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는 또 120개 공공기관의 연봉제 도입을 점검하고 “공공개혁을 끝까지 추진해 달라”고 독려했다. 그 다음으로 이를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에 이어 민간에까지 확산시키려 한다. 자본의 위기 · 공황의 손실을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전가하는 정책이다. 어디에도 노동자들의 안전지대는 없다. 공황이라는 태풍을 멎게 하는 길은 노동자를 폐기(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폐기(사회화)하는 길뿐이다.

국가권력은 모든 억압기구를 다 동원하여 ‘노동자 죽이기 = 자본 살리기’의 등식으로 파쇼통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세는 노동자계급에 있어 ‘최대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가 되는 상황이다. 구조조정의 경쟁에 나선, “노조를 설득하겠다”고 나선 야당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지 못하면 필패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자계급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하는 길뿐이다. 이제 짓눌려 왔던 노동자계급이 목숨을 내놓으라는 국가권력과 자본에 맞서 반격에 나설 때이다. 대충 싸우다가 말면 끝장난다. 최대치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가 되는 정세다. 2016년, 노예연봉제 · 상시 해고제 · 공기업 사유화에 맞서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역동성을 조직하자!

확고한 투쟁의 구심이 형성되면 거대한 투쟁력을 만들 수 있다!

정권의 공세는 전체 노동자계급, 특히 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정부의 분할통제 술책을 넘어 하나로 단결하여 하나의 목표 아래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 가능성의 제1의 과제는 투쟁구심을 확고하게 형성하는 일이다. 이미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 단일의제로 공식적인 쟁의권을 확보했다. 중노위가 조정안을 내고 노조가 거부함으로써 조정이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노조가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파업찬성으로 이미 순환파업 일정을 가동하고 있다. 가스노조도 쟁의권을 확보하고 투쟁에 나섰다. 모든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이 투쟁구심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투쟁할 태세다. 공공부문 노조는 9월 23일 파업 D-day를 공식화하고 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등 범공공부문 노조들이 공동의 투쟁과제를 안고 있다.

공동파업투쟁의 불길로 솟아올라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를 비롯한 핵심노조들이 단호하고 끈질긴 파업투쟁을 전개하는 것이다. 철도노조의 경우 최소한 지난 2013년 23일 파업 정도는 시수해야 한다. 지도부들이 구속을 각오하고 단호한 의지가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조직력과 투쟁력의 편차는 늘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싸워 볼 만하다”고 판단하

면 투쟁전선에 합류할 노조도 늘어날 것이다. 온갖 소방관(국가권력, 야당, 수구언론 등)들이 진화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이 ‘끝 수 없는 불’을 지피는 것을 목표로 투쟁을 준비하자. 공공부문 투쟁이 들불이 될 수 있도록 다부지게 준비하자!

노조의 현장간부, 현장 활동가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조간부들·현장 활동가들은, 아래로부터 투쟁의 태세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자! 현장간부들 혹은 조합원들은 ‘싸워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더욱 심화된 인식이 필요하다. 자본의 위기·경제공황으로부터 밀려오는 노동자 죽이기 공세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유린할 것인지, 어떤 태세로 싸워야 하는지, 왜 당장 눈앞의 성과급이다 임금 동결이다 하는 통제를 위한 페널티를 넘어서 싸워야 하는지... 얼마나 끈질기게 파괴력 있는 투쟁을 조직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신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자.

정작 파업투쟁에 불이 붙으면, ‘양의 탈을 쓴 야당’들이 덤벼들어 투쟁을 교란할 것이 뻔해 보인다. 혹시 지도부가 면피용 투쟁에 한정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러한

사태를 너끈히 넘어설 수 있는 아래로부터 열기와 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현장관리자들의 준동에 대해서는 즉시 응징하여 아래로부터의 자신감과 조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 단순한 집회 참석 수준이 아니라 일상적인 현장투쟁과 공동실천·공동투쟁을 조직하여 체질을 강화해 나가자. 현장간부들이 소조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이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일단 민주노총 7월 파업을 1차 시기로 하여 9월 공공부문 총파업 일정까지 밀도 있는 일상투쟁으로 전면적인 전투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자!

공식적인 노동조합의 연대와 공동투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현장 활동가들의 긴밀한 소통체계는 원활하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공기업·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노조뿐만 아니라 전교조·공무원노조의 활동가들이 목적의식적인 연대와 공동실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제다. 정세인식, 투쟁의 기초와 방침, 현장 조직화 전반, 투쟁과정에서 제기되는 온갖 교란요인에 대한 판단과 대응에 활동가들의 조직적인 실천이 필수 불가결하다. 노동전선의 공공부문 소속 회원들이 더욱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진행되는 활동가 공동실천단 위를 재편 강화하여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하도록 속도를 내자. **노동전선**

공무원, 교육노동자 공동투쟁을 위해

총선 후 잠시 ‘협치’ 운운하던 박근혜가 ‘누가 뭐라 해도 내 길 간다’를 계속하고 있다. 조선업종 실업 지원책이라고 발표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조선3사(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를 제외하여 노동조합에서 노동자를 분리하고, 파업 준비 중인 노동조합의 손발을 묶어보려는 속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파업은 절대 안 되고, 자본과 정권이 시키는 대로 직무성과와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라고 한다. 노동자와 노조는 자본과 정권에 무조건 항복하라고 요구한다. 노동조합에는 ‘당근’조차 필요 없고 오로지 ‘채찍’만이 있을 뿐이라는 박근혜 정권의 본질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자본은 살리고, 노동자·민중 죽이기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야당 ‘죽치기’에도 나섰다.

공공부문과 공무원, 교육노동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취업규칙을 무시한 채 경영평가와 성과급으로 노동자를 협박하여 강제 동의와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하도록 불법을 강요한 상황이다. 공무원노동자와 교육노동자

의 경우는 성과퇴출제 관철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시도하고,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하는 공무원과 교원은 최고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규칙을 개정했다(교원의 경우 지난 5월 입법 예고된 상태). 성과급 폐지 투쟁에 나선 공무원, 교육노동자의 투쟁 의지를 약화시키고, 그를 통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성과급 폐지 투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아니, 이미 정권은 공무원노동자와 교육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법(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형식을 갖추어 놓고, 그 ‘특별법’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어 노동조합운동 싹을 아예 잘라 버리려 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민주노총은 7월, 9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7월에는 6일 건설노조를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조선업종을 중심으로 총파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보건 의료노조, 전교조 등 4개 공공 관련 노조는 성과퇴출제 관련 하반기 공동투쟁을 준비 중이다. **6면으로 이어짐**

한광호 열사정신계승과 유성지회 노조파괴에 맞선 총노동 공동투쟁전선을 확산시켜 나가자!!

유성지회, 현대차의 자동차부품사 노조파괴에 맞선 투쟁이 어언 6년이 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차는 묵묵부답으로 오리발을 내밀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유성 영동지회 한광호 열사가 현대차의 노조파괴로 인한 사회적 타살로 목숨을 잃은 뒤, 유성 노동자들이 현대차 정몽구와 유시영 구속을 외치며 서울상경투쟁을 한 지도 100일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밤에는 잠 좀 자자며 외치던 유성지회 노조 투쟁 6년이 지난 지금,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부품사에서는 주간 연속 2교대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그룹과 창조건설팅이 주도한 복수노조와 용역강패를 앞세운 노조파괴는, 유성지회만이 아닌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 전반의 문제가 되었다. 복수노조와 용역강패를 동원한 노조파괴로 무수한 사업장의 노조들이 파괴되었다.

금속노조 만도지부, SJM지회, 갑을오토텍 등이 최근 노조 파괴 경험을 하였고,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콘텐탈, 경주발레오 등이 노조파괴와 복수노조 공세로 힘겹게 민주노조 깃발을 움켜쥐고 있다.

유성지회 투쟁은, 작금 현대기아차그룹에 의한 자동차부품사 노조 파괴의 최전선에서 민주노조 깃발을 움켜쥐고 있는 싸움이다.

유성지회 투쟁은, 당면 금속노조의 자동차부품사 노조파괴를 막고 있는 투쟁이며, 이후 금속노조 자동차부품사들의 복수노조를 앞세운 노조파괴 저지를 위한 투쟁이다.

또한 현대기아차그룹과의 유성지회 전면 투쟁은, 작금의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리전이며, 금속노조의 명운이 걸린 투쟁이기도 하다.

금속노조 중집에서 7월 22일 현대기아차그룹 양재동 사옥 앞에서의 총투쟁을 결의하였다.

한광호 열사가 산화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난 지금, 현대차의 노조파괴 책동으로 사회적 타살된 한광호 열사의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 지금,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그룹의 노조파괴에 맞선 즉각적 총파업을 선언하고, 지역과 현장에서 현대기아차그룹에 대한 전면 투쟁의 기조로 현장공동파업투쟁을 조직하고 나서야 할 때이다.

현대기아차그룹의 노조파괴에 금속노조를 위시한 총노동진영이 지역과 현장에서 동조파업으로 한광호 열사정신계승투쟁과 민주노조 사수 투쟁을 위한 총노동 투쟁으로 7·8월

현대기아차그룹과 끝장투쟁을 전개할 때이다. **노동전선**

5면에서 이어짐 이에 앞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투쟁이 전개되었고,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성과급 폐지 공무원·교사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노동기본권 쟁취와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1박2일 공동투쟁을 전개했다. 자본과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모든 부문 노동자의 총력투쟁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특히, 공공 관련 4단위 공동투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공동투쟁은 앞으로 전개될 노동자 투쟁에서 부문별 공동 요구, 공동투쟁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공공 관련 공동투쟁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이 모든 노동자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으로 상승·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공동투쟁 경험은 앞으로 공무원과 교육노동자 투쟁, 공공 관련 4단위 투쟁은 물론 전체 노동자 투쟁의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비록 공동선언과 간부 중심, 집회 중심 투쟁이라는 한계가 있긴 했지만 앞으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박근혜 정권의 공공부문과 공무원, 교육노동자에 대한 공세가 그칠 줄 모르는 상황, 노동·정치 기본권조차 외면당하는 공통 조건, 그리고 성과퇴출제에 따른 신분 불안이 대다수 공무원, 교육노동자의 분노로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이 이를 가늠케 한다. 다만, 선언과 집회 투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무원, 교육노동자 공동 파업, 대중적 거리투쟁, 그리고 대정권 투쟁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연대회의’를 공동투쟁을 위한 투쟁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중앙 단위뿐 아니라 현장이 투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지역 단위 공동투쟁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층 단위 공동투쟁에서 더 나아가 지역 단위 현장공동투쟁을 통해 현장이 하반기 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의 실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민주노총 7월 총파업 투쟁에 가능한 공무원, 교육노동자 동력을 최대한 결집시키자. 상반기 공동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동력을 바탕으로 현장을 조직하여 하반기 공공 관련 4단위 총력 투쟁,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공동 총력 투쟁을 성사시키자. **노동전선**

투쟁하는 노동자와 연대하는 이들의

공양나눔

&

심을 위한 문화제

2016. 7. 6 (수)

18시 저녁공양

사찰음식전문점 “삼소”, 조계사 맞은편 2층

19시 문화제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지하2층)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해고자복지투쟁특별위원회 (전/해/투)

위장도급 분쇄!
정규직 전환 쟁취!

삼척으로 가도래요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들을 응원하는 해변 가족 캠프

2016년 7월 9일 ~ 10일
삼척 시내 / 해변

▶ 서울은 9시 30분 대한문 출발입니다(참가비 3만5천원)
▶ 서울 출발 신청 및 문의 : 010-9633-0314
▶ 전체 일정

7월 9일	15:00	결의대회 (삼척우체국 앞)
	16:30	본사 앞 힘 모으기 (공장 앞)
	17:00	미션 동해바다 (삼척해변)
	19:30	삼척 시민한마당 (삼척해변)
	21:30	힘내라! 동자들 (삼척해변)
7월 10일	08:00	낚시 및 조개채취 (삼척해변)
	11:00	광구 앞 기자회견 (공장 앞)

동양시멘트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후원계좌 : 362701-04-124913 국민은행 김소연